

# SPECIAL REPORT

2020년 11월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

##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로 발전하여 평화로운 국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사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

©2020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II:  
정치규범과 체제 갈등**

**미국의 중국 체제 압박:  
배경, 특징, 전망**

2020. 11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1. 서론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무역에서 시작해서 급기야 체제와 이데올로기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체제와 이념에 대한 공세를 펼친 것은 비단 트럼프 정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냉전기는 물론이고 1989년 천안문 사건 직후에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통한 평화연변(Peaceful Revolution)을 시도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매년 최혜국대우(MFN) 연장 중국의 인권, 신장(新疆), 시짱(西藏, 티베트) 문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중국 체제에 대한 압박은 기존과는 차원이 달랐다. 일단 미국 공세의 범위와 정도가 역대급이다. 그리고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오면서 세력 경쟁의 국면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중국도 미국의 예상 밖의 전면적인 고강도 압박에 당혹해 하고 있다. 미국과의 갈등이 무역에서 시작해서 기술, 환율 등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패권 경쟁도 세력 경쟁도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산당 체제와 핵심이익에 대해 전면적 공세를 펼치면서부터는 중국에서도 미국과의 세력 경쟁, ‘신냉전’의 초기 단계 진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체제 문제의 경우 맞대응 할수록 중국 체제의 내재적 취약성을 국제사회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무역, 금융, 첨단기술 등 경제분야와 달리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으며 체제와 가치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 간의 체제 대립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인가?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서 인권, 민주주의, 글로벌 규범을 중요시 해왔다. 바이든 당선자는 이상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맹국과의 협력, 다자주의 참여를 통해 실현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과 체제와 가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일인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 강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공산당 체제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대응 수단도 많지 않지만 타협의 공간도 넓지 않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직면하여 대내적으로는 결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우호국가의 외연을 확대하여 반(反)중국의 국제연대 형성을 역지하는 외교에 주력하는 우회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의 체제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가능한 한 체제 경쟁의 국면으로 확산하는 것은 회피하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단속과 집권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향후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체제 취약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그에 따라 중국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체제 위협을 인식하는가 여부가 양국관계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 2. 미국의 대중 체제 압박과 미중 갈등의 요인 및 배경

미중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구조적 측면, 양국의 국내정치와 리더십 변수, 그리고 최근 일련의 돌발 변수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미중관계 악화의 기저에는 기성강국과 신흥강국 간의 세력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이 예상보다 가파른 부상을 실현하면서 미중 간 국력 격차도 빠르게 축소되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에 육박하면서 기성강국과 신흥강국 간 견제와 대응이라는 전형적인 세력 경쟁 과정의 연장 선상에서 양국 간 체제와 이념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강한 리더십을 소유한 정치 지도자의 출현과 양국의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양국 간 갈등을 체제 문제로까지 확장시킨 측면이 있다. 시진핑 정부에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중화민족의 부흥’을 기치로 중국의 부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통한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방안(solution)을 제시하고 더 좋은 사회제도를 탐색하는데 중국 지혜로 기여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시진핑 정부의 부상 전략을 미국의 가치와 패권 지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미국 경제 침체를 ‘중국 탓’으로 규정하고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했다. 미국 내 반중정서가 역대 최고조에 이르면서 ‘중국 때리기’는 대선용 호재로도 적극 활용되었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대치하면서 양국 간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체제 대립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돌발변수가 양국 간 체제 대립을 격화시켰다. 중국발 코로나가 오히려 미국에서 더 확산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중 양국은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고 급기야 체제 대립으로까지 비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우한(武漢)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중대한 증거가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sup>1</sup> 미국 정부와 언론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의 원인을 언론통제, 대외 정보공개 불투명성, 수직적인 권력 구조라는 중국의 체제와 제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이 중국에 ‘오명’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 코로나19 발생 원인이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다.<sup>2</sup> 코로나 19 책임론을 둘러싼 미중 간의 치열한 설전은 체제와 인종에 대한 비난과 감정싸움으로 비화하여 양국 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홍콩 사태와 대만 차이잉원(蔡英文)의 재집권 또한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변수가 되었다. 2019년 3월 홍콩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홍콩정청과 중국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했고, 2020년 6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홍콩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고 압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홍콩 사태의 여파로 반중국의, 독립성향이 강한 대만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예상 밖으로 선거에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였다. 이 또한 미중 양국의 전통적 갈등 요인이었던 대만문제가 더욱 쟁점화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코로나 사태와 거의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 모두 중국에는 체제의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도전을 야기할 수 있는 돌발 변수였고, 반대로 미국에는 중국 압박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두 사건은 세력경쟁 등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되면서 미중 간 체제와 이념 대립을 한층 격화시켰다.

<sup>1</sup> “Mike Pompeo says ‘significant’ evidence new coronavirus emerged from Chinese lab” ABC (May 03, 2020). <https://www.abc.net.au/news/2020-05-04/pompeo-says-evidence-shows-coronavirus-emerged-from-chinese-lab/12210882>

<sup>2</sup> 24만여 명의 트위터 팔로워가 있는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미국을 겨냥해 “미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에 가져왔을 수도 있다”라는 트윗을 날리면 대응해 논란을 야기했다. “中외교부 대변인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 가져왔을 수도.”, 연합뉴스(2020-03-13).

### 3.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체제 압박의 방식과 내용

트럼프 정부의 중국 체제와 이념에 대한 공세는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이 사실상 체제 수호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핵심이익에 대해 미국은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는 국가통합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신장, 시짱, 홍콩, 대만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전면적 압박을 가했다. 미국 의회는 「티베트 상호 여행법(2018)」, 「티베트 정책과 지지법(2020)」, 「위구르족 인권 정책법(2020)」 등 제재 법안들을 연이어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2019)」, 「홍콩자치법 (2020)」(Hong Kong Autonomy Act) 등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외국인과 법인 및 그들과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도 이어서 의회를 통과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홍콩에 제공하던 특별대우를 종식시키는 ‘행정명령 13936’도 발표하였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도 중국과의 수교 이후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미국과 대만 간 단교 이후 미국의 최고위급 정부 인사가 연이어 대만을 공식 방문하여 중국을 자극하였다. 8월에 엘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 장관에 이어서 9월에는 국무부 키스 크라크 경제 담당 차관이 대만을 공식 방문하였다. 「2020년 미 국방수권 법안」 등 10여 개의 대만 지원, 협력 관련 법안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되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양적으로도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 수출도 이루어졌다.

둘째, 트럼프 정부는 시진핑 권위주의 체제와 공산당에 대한 공세도 서슴지 않았다. 2020년 5월 발표한 백악관의 ‘미국 대중국 전략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보고서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지칭하면서 사실상 상이한 ‘체제 간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sup>3</sup> 미국은 ‘중국’과 ‘중국공산당’을 분리하여 부르기 시작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행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라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시진핑 주석을 ‘실패한 전체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 국민들은 미국과 협력해 공산당을 변화시키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sup>4</sup> 미국의 중국 체제 및 이념에 대한 공세를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셋째, 트럼프 정부는 중국 봉쇄를 향한 국제 연대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대만, 홍콩, 신장, 시짱 관련 현안들과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문제점들을 지속해서 거론하며 자유진영 국가들의 결집을 자극하였다. 즉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체제와 이념 문제를 반중국의 국제연대를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UN 인권이사회와 UN총회에서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2020년 UN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 제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반중국 분위기를 조성해갔다.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미국 주도의 반(反)화웨이 전선에 합류하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가치와 이념 공세를 통해 국제적 탈동조화(decoupling) 및 리쇼어링(reshoring)을 자극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동맹

<sup>3</sup>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May 20, 2020).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sup>4</sup> “Communist China and the Free World’s Future,” Speech by MICHAEL R. POMPEO, Secretary Of State in The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Yorba Linda, California (JULY 23, 2020) <https://www.state.gov/communist-china-and-the-free-worlds-future>.

체제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 태평양 전략(FOIP),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쿼드플러스(Quad+)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 4.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체제 압박 전망과 과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체제와 이념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가파른 추격에 대한 구조적 경계심, 미국 내 높은 반중국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인권, 민주주의, 국제규범 등 가치에 기반하여 중국에 대한 공세를 해왔다.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과의 협력, 다자주의의 적극 참여를 역설해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권, 민주주의, 국제규범 등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기구와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자는 임기 첫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제기구와 제도 등 다자 무대에서 국제 규범과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행정부가 남긴 과제로 인해 중국에 대한 체제 압박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훼손된 동맹국들과의 신뢰, 다자무대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회복이 늦어지면 그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도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인권’이라는 명분을 통해 사실상 글로벌 탈(脫)중국화, 중국 고립화 시도를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예컨대 신장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한 33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였고,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중단을 선언했다. 미 의회는 연방연금기금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 전반에 반중국 정서가 확산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동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유럽 등 다수 국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 의회의 연이은 중국 제재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 등 미국 기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비민주적 행태와 인권 탄압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공산당 체제를 압박하고 체제의 평화적 변화를 추동하고자 한다. 그런데 홍콩, 시짱, 신장 이슈를 통해 중국 공산당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중국은 비록 핵심이익의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들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통제력과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들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내정간섭’으로 간주되어 중국 내 고양된 애국주의의 영향으로 오히려 공산당 체제에 대한 지지와 내부 결집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공산당 체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반면에 결과적으로 냉전기 소련처럼 중국의 체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한 채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구조화, 장기화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체제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反)중국의 국제 연대를 조성,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냉전시대와 비교할 때 미국이 장기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 수단, 가용 자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코로나 사태로 세계경제가 침체될수록 국제사회의 중국의 거대 잠재시장과 투자에 대한 기대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5. 중국의 인식과 대응

중국은 미국의 전면적인 체제 공세에 직면하여 당혹해 하고 있다. 미중관계는 미국의 ‘신냉전’적 대결 정책으로 인해 1972년 닉슨 방중 이래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공세 목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부 중국 내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중국을 냉전시대처럼 ‘제2의 소련’으로 만들려 한다고 격앙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도적 의견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제2의 일본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이례적으로 강경하고 거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성강국의 신흥강국에 대한 견제라는 세력 경쟁의 연장선상에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 체제와 이념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류이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 전문가들의 언론 논평을 통제할 정도로 신중하게 처세했다.

그리고 미국이 역대급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중국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강경 일변도만은 아니다. 공산당 체제와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있다.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기로 한 록히드틴, 보잉 등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공언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에 선제적으로 도발하지는 않으면서 다양한 우회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대립이 확장되는 것은 피하면서 관계 회복의 계기를 찾고 있다.

중국의 대응 행태를 요약하면 첫째, 중국은 핵심이익, 특히 시진핑 및 공산당 체제의 위상과 안정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대응하는 모양새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국제사회와 국내 인민들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며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예컨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020년 8월 25일 10면부터 12면까지 3면에 걸쳐 3만 1천 자로 ‘폼페이오의 대중국 연설에 가득 찬 거짓과 사실 진상 《蓬佩奥涉华演讲的满嘴谎言与事实真相》’이라는 제하의 반박 기사를 게재했다.<sup>5</sup> 기사는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을 ‘반공 국제연대’ 결성을 위한 파렴치한 연설로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인민일보 반박 기사는 미국이 이념과 가치를 내세워 사실상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는 진상을 국제사회와 중국 인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서 사실상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제적인 탈중국화와 반중국의 국제 봉쇄망 구축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도 여전히 평화공존과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와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관계 회복의 여지도

<sup>5</sup> “蓬佩奥涉华演讲的满嘴谎言与事实真相,” 「人民日報」(2020.08.25).



남겨두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 부장이 7월 중미 싱크탱크 미디어 영상 포럼 축사를 통해 “중미 양측은 상대방을 바꾸는 방법이 아닌 상이한 제도와 문명 간의 평화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에 전면 대항할 생각도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자국민의 복지를 개선하고 나날이 커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sup>6</sup> 그리고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공세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도 ‘미국 국내 일부 정치 세력’의 중국에 대한 편견과 적대시가 문제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 대신 이후 판도 변화를 고려하면서 분리 대응의 방식을 통해 관계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활용하여 오히려 인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내부 결집과 통합을 도모하고, 코로나 19위기로 손상된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중국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족주의가 고양된 중국에서는 정작 반미 정서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지 않다.

중국 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언론으로 평가 받는 환구시보(环球时报)에서 조차 인터넷 공간에서의 중국 일반인들의 여론에 대해 “중국인 대다수는 미국에 크게 실망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인들 대다수는 결코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용의 사설을 게재한 바 있다.<sup>7</sup> 시진핑 정부는 반미 민족주의 정서를 외부로 투사하여 소모하기보다는 내부 역량 강화에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정부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유사한 대응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19년 7월 30일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람이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이 홍콩 시위에서 조속히 손을 떼고 위험한 게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sup>8</sup> 즉 중국 정부는 미국이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홍콩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홍콩문제의 ‘미국배후론’을 시사하고 있다. 홍콩인들의 민주화 시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대외적 이미지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지만, 오히려 국내 정치적 부담은 줄어든 효과 있었다. 중국인들에게 자치 허용, 인권 탄압, 민주주의 억압 등 홍콩인들이 저항하는 본래의 이슈는 덮이고 오히려 미국의 중국 압박 수단으로서의 홍콩 문제로만 남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과거 시짱과 신장 문제에서도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전후 시짱과 신장지역의 대규모 독립시위와 그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지지에 대해 중국인은 오히려 중국의 부상을 좌절시키려는 음모로 인식하였다. 중국 소수민족의 인종 민족주의와 분리독립 운동에 ‘외세’의 지원이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절대다수인 한족 중국인들은 ‘중화의 부흥’을 좌절시키려는 ‘서방의 음모’로 인식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중국 정부가 동원하고 있는 국가 민족주의가 ‘중화’라는 일체를 강조한 결과로 인종 민족주의가 발휘될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9월 열린 제3차 중앙신장공작좌담회(中央新疆工作座談會)에서 “신장 지역에서 민심을 결집해 중화민족 공동 의식을 고착시키고 신장 이슬람교의 중국화를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sup>6</sup> 王毅, “守正不移, 与时俱进 维护中美关系的正确方向 —在中美智库媒体论坛上的致辞,” 2020.07.09. <https://www.fmprc.gov.cn/web/wjzbzhd/t1796282.shtml>

<sup>7</sup> “社评：中美博弈加深，中国老百姓是啥感受,” 『环球时报』 (2020.08.18.)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3zWSbPyikkL>

<sup>8</sup> 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2019.07.30).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shl\\_673025/t1684475.shtml](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shl_673025/t1684475.shtml)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화’로의 통합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하며 힘을 실어주었다.<sup>9</sup>

한편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최대 압박 속에서 오히려 국내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내수성장과 기술 자립을 겨냥한 쌍순환(雙循環)론을 들고 나오고, 빈곤 퇴치 운동을 전개하고, 선전(深川) 방문을 통해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를 연상케 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과의 경쟁을 장기전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탈공조화(decoupling) 및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한 탈중국화 시도에 대응해서 중국 경제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 대립은 가능한 우회하면서 미국 주도의 반(反)중국의 국제 연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 전면적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 탈중국화, 국제적 중국 포위망 형성을 무엇보다 경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군 확보를 위한 전방위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19로 훼손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인 방역 및 의료 지원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125개국에 의료 물자를 보내고 150개국과 코로나19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시진핑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30여 회 전화 외교를 통해 방역 지원과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도 방역지원과 연계 시켜 우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반 사이에 일대일로 사업 참가 국가는 12곳, 국제기구는 2곳 더 증가하여 각각 138개국에 31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sup>10</sup>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8월과 9월 사이에 양제츠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 웨이핑허 국방부장이 각각 지역 분담을 통해 유럽, 동남아, 한국 등 14개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전방위 외교를 전개했다.

아울러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자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자주의와 다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와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한편, 바이든 정부가 등장할 경우 다시 재연될 글로벌 거버넌스 경쟁에도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달리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협력과 지원 외에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예컨대 기왕에 구축된 일대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제지원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압박의 국제연대에 참여하는 것을 억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 중국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을 소모하는 역설적 기능을 하게 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리고 중국은 ‘때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정작 외교적 반발 이외에 특별히 강경한 대응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반면에 명백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에 참여하는 국가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 강한 압박과 제재를 동원하여 반(反)중국 연대 참여에 강한 경고를 발신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편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한국, 호주, 캐나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대만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와 군사 훈련 등을 동원하여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결국 당근도 채찍도 모두 경제적 수단으로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지원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면서 유일한 당근 수단의 효과도 도전 받고 있다.

<sup>9</sup> “习近平出席第三次中央新疆工作座谈会并发表重要讲话,” (2020-09-27) 『新华社』

<sup>10</sup> 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2020.11.18) [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_673025/t1833328.shtml](https://www.fmprc.gov.cn/web/fyrbt_673021/jzhs_673025/t1833328.shtml)

## 6. 중국 대응의 딜레마

미국의 전면적 공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행태를 살펴보면 시진핑 정부의 최대 관심은 결국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이 핵심이익이라고 역설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와 달리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주권과 안보에 취약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콩, 신장, 시짱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시진핑 정부의 이미지와 평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으며 체제의 부담과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이미 이들 지역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주권과 내정’에 대해 압박을 가할수록 오히려 인민들의 애국주의와 중화민족주의가 자극되어 내부 결집과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초래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당면한 과제는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기반은 여전히 경제성장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압력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중국 경제의 회복, 특히 ‘중국의 꿈’ 비전의 첫 번째 목표인 ‘2021년 소강 사회의 전면적 실현’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요컨대 시진핑 정부에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은 주권이익, 안보이익 보다는 ‘발전이익’ 일수 있다.

시진핑 체제는 강력하고 견고하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삼중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고도성장 시대가 마감되면서 지난 40년간 지탱해왔던 공산당 집권 정당성의 중요한 기반이 침식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의 꿈’이라는 비전,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사회 통제를 통해 정당성 위기에 대중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강한 사회 통제는 피로감과 사회 정체를 초래함으로써 오래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의 꿈’ 비전 또한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위기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인민들의 고양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강한 국가’의 위상을 과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선택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과 견제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 발원지 논란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이미지는 크게 나빠졌다. 국제사회에 반(反)중국 정서가 강화되면서 탈동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며 내치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공산당 집권자들은 역사적으로 내우(內憂)가 있을 때 외환(外患)이 겹치면 왕조가 위기와 몰락으로 이어졌던 역사의 교훈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치에 집중하여 외환을 방지하거나 대비하는 선택을 해왔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공세를 공산당 집권 강화의 중요한 빌미로 만들면서 성장을 위한 시간을 벌고자 한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은 시간 싸움이며 시간은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갈등을 확장하기보다는 30년 미래를 상정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을 체제 결집과 안정에 역이용하고 우회하는 대응 방법은 공산당체제의 위기관리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지언정 체제 유지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 위기, 미국의 압박,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경계, 신성장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 중국 인민들의 고양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성과, 특히 ‘종합적인 삶의 질(美好生活)’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성취를 이루어 낼 수 있느냐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갈등 전선을 확장시키기 보다는 내부 역량 강화와 체제 안정성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 7. 미중 관계 전망

미중관계가 짧은 시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세력 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양국의 국내정치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향후에도 미중 양국의 국내정치경제 요인이 양국 간 세력 경쟁이라는 기본적 추세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양국이 외견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립하는 추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양국 모두 국내의 복잡한 정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직접 충돌과 대립 구도를 지속하는 데 있어 국내정치적 피로감과 저항,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중관계에 새로운 변수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인권문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국 간 대립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중국 학계의 주류적 예상이기도 하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로의 귀환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제기구와 제도에서 규범과 규칙을 둘러싼 양국 간 경쟁과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 후유증과 코로나 확산, 경제침체, 인종 갈등 등 산적한 국내문제로 인해 대외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은 있다. 대외정책에서도 훼손된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로소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세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면 이 또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시진핑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 미국의 공세를 약화 또는 우회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시간벌기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정부에게 2021년은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해로서 사실상 ‘중국의 꿈’ 비전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사실상 중간 평가의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2022년 20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총서기의 연임 문제를 최종 조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국내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외부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해소 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양국의 국내정치상황이 양국관계 악화의 주요 배경이었듯이 당분간 양국은 국내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과도적 조정기를 가질 수도 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를 겪으면서 미국에 대해 보다 근본적 불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본격적인 세력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내부 체제 안정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시진핑 정부에게는 핵심이익 가운데 ‘발전이익’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향후 가치와 이념 갈등보다는 오히려 중국 발전에 주요한 사업인 일대일로, 5G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그리고 국제 다자경제 협력 분야 등에서 첨예한 경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발전이익은 그 특성상 주권이나 안보이익처럼 제로섬 대결 게임으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요컨대 미중관계가 체제와 이념대립으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은 했지만, 이로 인해 양국이 직접적인 충돌로 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중국의 주권 핵심이익 가운데 대만 문제의 경우는 충돌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재 독립성향이 강한 대만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급증하였다. 중국도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장의 수위가 높다. 대만문제는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중 양국 모두 일정 정도에서 상호 자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치 않은 우발적 사고에 의한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8. 한국에의 함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미중 대립과 경쟁의 추세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미중 양국의 한국에 대한 견인과 압박도 결코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한국은 오히려 더욱 복잡한 고난도의 선택 딜레마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미중 양국은 한편으로는 외교 공세와 대치를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 각기 동맹과 동반자를 견인하고 이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은 중국을 압박, 고립시키고자 하고, 중국은 포위를 저지하고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경쟁이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우방과의 협력을 복원하고 다자무대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청하고, 다자무대에서 가치와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진영 연대를 통해 중국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냉전 시대와 비교할 때, 미중 양국이 세력권을 확장할 수 있는 명분, 수단, 자원이 충분치 않다. 반면에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국제사회의 각자도생의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도 미중 어느 한쪽에 일방적 줄서기를 하기보다는 양국 모두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견제와 경쟁’의 동학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북핵 문제, 그리고 ‘남남갈등’으로 인해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여러 가지 현안에서 미중 양국으로부터 원치 않는 압박과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한국의 동맹 역할 확대 요구가 오히려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적 탈중국화, 국제적 중국 포위망 형성을 무엇보다 경계하고,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국 국제연대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외교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 오히려 원하지 않은 미중 경쟁의 한반도로의 확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의 심각한 남남갈등 역시 의도치 않게 미중 갈등 상황이 국내정치 대립과 연동되어 미중 사이의 선택의 딜레마를 스스로 한반도로 소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부터 특수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미중 경쟁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투사될 경우,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여 상황과 이슈에 따라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를 모색하는 것 외에 대안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소한 한국이 미중 갈등과 경쟁을 스스로 한반도로 소환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

■ **저자: 이동률** 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대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 민족주의, 소수민족 문제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Deciphering China’s Security Intentions in Northeast Asia: A View from South Korea,” 《중국의 영토분쟁》(공저)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백진경 EAI 연구원·연구실장  
문의: 02-2277-1683 (ext. 209) j.baek@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1월 25일

“[스페셜리포트] 미국의 중국 체제 압박: 배경, 특징, 전망” 979-11-6617-051-5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EAI**

EAST ASIA INSTITUTE